

택시 물량 빼서 '타다'에?... 정부, 면허 장사 논란

말소 물량 떼주기... 공급과잉 해소 안돼 과잉 돌 빼서 뿔 돌로... 땀질 처방 우려 법인택시 월급제 조기 정착도 난항

정부가 운송사업 허가를 통해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감차 사업을 통해 줄여준 택시물량 만큼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윤배반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면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승차거부 해결 등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완전 월급제 조기 정착도 정부 기대와 달리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업계는 월급제를 기반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업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뺄 때는 별도 관리기구를 뒤 고령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확보한 물량 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운영할 수 있는 택시 대수를 정해 허가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

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여금은 플랫폼 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방식의 본납을 기본으로 한다. 원하면 일시불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기여금으로 사들이는 택시면허는 시세를 반영한다고 했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2월 현재 프리미엄이 7500만~8000만원쯤이다.

이번 상생안에서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택시업계 반발이 커 빠졌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까지 맡게 해 보내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빌리는 경우는 예외다. 타다는 예외조항을 파고들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사업을 벌인다.

택시업계는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반발한다. 택시업계가 끌려가지 반대하면 타다는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타다가 1000대쯤의 차량을 운영한다고 보면 월 분납으로 매달 40억원쯤, 시세를 고려한 일시납으로 750억~800억원을 내야 제도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17일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업계는 월급제를 기반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게 핵심이다. 사진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 사진=시정경제DB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에 대해 이윤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과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적정 택시 대수는 19만9715대이다. 현재 공급된 택시는 법인택시 포함 25만 5131대로, 5만대 이상 초과 공급된 상태다. 개인택시 비중은 전체의 65%다. 정

부는 올해까지 택시 2만5000대를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차 실적은 2000대에 못 미친다.

택시 정책에 정통한 공역자치단체 한 공무원원은 "신설 제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택시 감차사업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기여금으로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 행정책적으로는 말소한다 해도 플랫폼 업체 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면허가 살아 있는 것과 진배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택시 총량이 있어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의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 택시와 플랫폼 택시는 다르다"며 "플랫폼 택시는 새로운 수요(시장)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토부 설명은 플랫폼 업계의 주장,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 기대와 달리 택시업계 현장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라는 의견이 적잖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버스는 기사가 바뀌어도 노선을 똑같이 달리지만, 택시는 사람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누구는 하루에 5만원을 벌고 다른 사람은 20만원을 버는 데도 똑같이 월급을 줘야 한다면 사업자로서는 변칙적인 운영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ruca@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Outdoor Bronze Lion Campaign

Title: MUSIC 음악
Client: CHUPA CHUPS (SNACK TO HOME LIMITED) 추파츨스
Agency: CHEIL WORLDWIDE HONG KONG

Product: CHUPA CHUPS
Copy: a sweet escape. 달콤한 해방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 '들썩'

정책실패-외부환경 악화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 안전자산으로 이동 움직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했다. 3년 1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인하이다. 예상보다 빨랐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달로 시기를 관측해왔다. 그만큼 대내외 환경의 악화와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 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축소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1%에서 0.7%로 낮춰 잡았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불가피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집값은 반등세를 띄고 있다. 정부가 추가 규제신호를 꾸준히 내비쳤지만 진정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7~8개월의 조정

거쳐 집값이 다시 상승한 것처럼 추가 규제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곧 적응한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낮아지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내 집 장만을 고려할 만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가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또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이는 곧 기준금리 인하 효과 상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 때 주춤했지만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하 예측과 맞물려 최근 3개월 연속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연중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4,000억원 늘어난 84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5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어떻게든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1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이어 5월 제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하했다. 3년 1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인하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건립주현. 사진=시정경제DB

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인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만간 추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더욱 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는 전세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에 힘입어 전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주인은 금리 하락으로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져 전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산 너머 산이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지난달도 실업급여 고공행진

6816억원... 전년비 20.8% 증가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난달에도 70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석 달 연속 이어지던 신기록 경신은 멈췄지만,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0.8% 늘었다. 지급액 신기록 행진은 멈췄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3월 6397억원, 4월 7382억원, 5월 7587억원으로 역대 최

고기록을 새로 써왔다. 지난달 7000억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업급여 신청은 도소매(600명)와 숙박음식(500명)은 늘고 제조업(900명)과 건설업(100명)에서 줄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53만명(4.0%) 증가했다. 전체 피보험자 수는 1368만7000명이다. 올 들어 6월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6월 기준으로 증가 폭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

상대적으로 팬층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로 증감이 엇

갈렸다. 자동차업종은 7100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600명 감소와 비교할 때 감소 폭은 작아졌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은 가입이 3800명 늘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개선이 영향을 끼쳤다고 노동부는 풀이했다.

식료품·의약품은 증가세, 섬유제품은 감소세를 각각 이어갔다. 특히 기계장비는 2017년과 지난해 6월 각각 1만1500명과 1만3000명 증가에서 지난달 1400명 감소로 돌아섰다. 월별로는 올해 4월 200명 증가에서 5월 100명 감소로 돌아선 이후 6월 들어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된 설비투자 감소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임정환 기자 eruca@meconomynews.com